



단결과 연대로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박근혜의 콧대를 꺾었다

조합원 총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 80.96%, 거부 68.59%! 정권의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되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총투표의 의미를 “합법노조 포기”, “14년 만에

비합법단체로”, “법외노조 선택”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 결과는 전교조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했던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조합원의 총의가 표현된 것이다. “전교조 단결의 구심, 박근혜에게 공로상을 주자”라는 농담이 유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도 결과지만 총투표까지의 과정에서 ‘들썩였던 현장’에 주목해야한다. 조합원 총투표까지 분회총회, 분회장총회 심지어 조합원들의 카톡방을 통해 학교현장의 토론이 활발했다. 지부/지회 집행부 및 활동가들이 발로 뛰며 조합원들에게 정부의 전교조 탄압 의도를 알리고 설득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전교조, 살아있네!”라며 박수치고 있다.

일치단결 한 길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대중조직에서 열흘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총투표 결과 28.09%가 수용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분열의 떡밥’을 던질 여지가 있다.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법외노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예상이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여러 지역에서 과장된 공포나 안이한 태도 등 이후 상황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정세에 대한 전망과 구체적인 투쟁계획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부의 설립취소 통보 그리고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전교조를 어떻게 함께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결의를 모아야 한다. 이것으로 일치단결된 전교조의 당찬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지나간 쟁점인 ‘법내 vs 법외노조’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길과 이를 위한 조직의 운영체계, 조합원 실천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거짓말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아갈 것인지, 학교 내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학생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위기를 연대와 혁신의 기회로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명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부는 24일 이후 설립취소 공문을 통보할 것이다. 전교조는 설립취소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노동부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에 소속된 전국의 단체가 816개나 된다. "전교조 선생님들의 시정명령 거부를 응원합니다! 전교조 샘들~ 핫팅!"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굣길을 함께 했던 전교조의 지지세력이다. 이들의 기대는 다름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전교조가 희망이다”라는 말을 실현하는 일이다. 정권의 굴복 요구에 단호히 저항하며, 참교육을 향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향해 한발 두발 걸어 나가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 조합원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교사중심의 문제에 갇혀있었다”, “다른 운동주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고립을 자초했다”, “그랬기에 박근혜도 전교조를 만만하게 본 것 아니냐”. 이는 전교조가 교사중심의 의제를 넘어서 학생, 학부모, 비정규직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해야한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다.

자발성과 자신감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힘은 자발성과 자신감이다. 아래로부터 제안되고 활동하는 ‘자발성’ 그리고 이번 총투표 결과에 따른 ‘자신감’이 정권에 맞서는 투쟁과 분회/지회를 다시 실천적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전교조 운동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전교조의 지위는 정부가 아니라, 조합원 그리고 전교조에 기대하고 힘을 실어주는 수많은 시민들과 동지들이 지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조직력을 굳건히 하고 연대투쟁을 더욱 확산하여 사회적 여론을 모아내자!